

아시아 태평양¹⁾ 국제관계의 安定性 確保를 위한 전제조건

— 강대국의 협조와 갈등의 상호관련성 —

金 振 昊*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계의 조망
- III. 제도마찰과 구조조정
- IV. 변화와 통합의 상호작용
- V. 전망 : 결론에 대신하여

I. 문제의 제기

21세기를 몇년 앞둔 아시아·태평양의 국제관계가 세계의 전환기에 어떻게 변용을 하여 어떤 양태로 새로운 질서가 수립될 것인지를 자명하게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기까지도 하다. 그 기저에는 인구·자원면에서 마지막 남은 개척지(?)로서 강대국들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달려들린 지에 대하여 우려와 경계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문화적, 지리적, 경제적, 안보적인 이유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분리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보기 위해서는 Arik Dirlik, "아시아 태평양권이라는 개념 : 지역구조 창설에 있어서 현실과 표상의 문제," 김 영화(역) 「창작과 비평」, 제21권 제1호, 통권 79호(1993/봄호) 참조; Stephen J. Anderson, "Japan as an Activist State in the Pacific Basin : Japan and Regional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I, No. 2(Summer/Fall 1993) 특히 이 논문의 제3장인, "Defining the Region : Membership in the Asia-Pacific," 참조.

로 보려는 시각과 이 세기말적 변용을 이용하여 과거 식민지로서의 뼈아픈 경험을 침철하지 않으려는 자력갱생적인 시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상을 투명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의 하나는, 이 지역과 관련된 강대국과 주변국의 사활적 이해를 「협조와 분쟁」(cooperation and conflict)이란 2개의 드렌드가 다이나믹하게 교차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변화와 통합이라는 도식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국익을 둘러싼 각국의 대응과 정책과제에 관한 분석이었지만 그것들을 협조와 갈등의 동전의 양면처럼 2개의 틀 속에서 밀접한 변동요인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에 의거, 아시아·태평양제국의 전략적 선택을 고찰하여 2000년 질서의 기본틀이 될 몇가지의 가설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아시아 태평양 국제관계의 眺望

1. 유럽의 탈냉전과 아시아의 탈냉전

유럽에 있어서 냉전의 종언은 '西'(the West)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경제체제가 동구 그리고 소련의 체제변혁을 재촉하면서 '東'(the East)인 아시아에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유럽에서 1989년은 '경탄해야 할 해'(annos mirabilis)를 지나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를 특징지어 온 냉전이 역사의 뒷면으로 후퇴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이래 「유럽의 대내전」(Great European Civil War)의 잔재를 불식하고, 미국과 소련 양초강대국의 간섭을 배제 스스로의 의사로 장래를 재정립하는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도 레닌·스탈린 주의의 독재체제가 그 위상이 흔들리면서 정치민주화와 경제 개혁·개방의 요청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전의 차원이란 유럽과는 다른 내부의 대항·항쟁이 사태를 일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²⁾

아시아의 冷戰이 熱戰의 무대로 된 한반도, 인도지나반도의 분쟁, 중국과 대만의 분리 등은 '전후 해방되어진 민족'의 독립과 통합과정에서 내부의 분쟁으로부터 발

2) Francois Godement, "Europe and Asia : the Missing Link," 「Adelphi Pater」, 276(1993), pp. 94-96.

생한 문제이고 미소가 개입한 냉전은 그러한 문제를 잠시동안 동결했던 것에 불과하다. 이 점은 근본적으로 통일민족이었던 독일을 점령·분할한 유럽의 냉전과는 그 기원과 본질에 있어서 다르며, 탈냉전하에서 독일의 재통일이 전유럽의 통합의 길을 열어들이는 것, 그리고 독일은 너무 강력해서 연합국이 분할 점령하였고 한국의 경우는 약속민족이었기 때문에 분할 점령하였고 한국의 경우는 약속민족이었기 때문에 분할 점령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한반도·인도지나반도, 그리고 등소평 死後의 중국문제가 '내전상황'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아시아 통합의 전망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³⁾

독일과 일본의 패배에 의해 생겨난 힘의 진공을 물어버린 냉전의 위상도 유럽과 아시아와는 다르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의 봉쇄정책 아무런 관계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냉전이 아시아로 확대된 것은 공산주의의 위협에 서방측의 힘을 결집해서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⁴⁾

봉쇄체제 테두리내에서 일본이나 한국은 NATO에 편입된 서독과 같이 다각적인 집단안전 보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적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냉전의 기원과 위상도 전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냉전구조의 해결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다.

탈냉전의 유럽질서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개혁, 東유럽 국가의 민주화, 독일의 재통일, 그리고 유럽의 경제통합의 4개의 주요한 과정을 거쳐야만 변용을 달성할 것이라고 본다.⁵⁾ 이들 각 분야에서 변화과 조정은 적지않는 내부긴장을 동반하겠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벽이 무너져서 '다른 체제'

3) Sun Zhengao,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XXIV, Np.2, (Summer 1993); Hari Singh, "Prospects for Regional Stability in South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Millennium』, Vol. 22, No. 2, pp.284-290; Muthiah Alqagappa, "Regionalism and the Quest for Security: ASEAN and the Cambodian Conflic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6, No. 2 (Winter 1993).

4) Amitav Acharya, "A New Regional Order in South-East Asia: ASEAN in the Post-Cold War Era," 『Adephi Paper』, 279(1993), pp.7-17; Yonosuke Nagai & Akira Iriye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Tokyo: Tokyo Univ. Press, 1987).

5) 金丸 輝男, "歐洲共同體: 國家障壁의 完全除去や目指すEC," 有賀貞(外), 『講座國際政治: 現代世界の分離と統合』,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pp.67-77; Chung H. Lee & Michael G. Plummer,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in the 1990s: Implications for Asia," 『Pacific Focus』, Vol. VIII, No. 1 (spring 1993), pp.99-101.

의 장벽이 풀린 이상 멀지 않는 장래에 제도적 융합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에 있어서는 미·소 초강대국의 냉전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해 분단됐던 국가의 재통합 내지 「탈냉전의 문재」를 더 해서 또 하나의 동서대립 즉 아시아적 정치체제와 서구적 가치체제와의 제도상의 알력⁶⁾이란 '이중의 문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 아시아·태평양의 변화와 세가지의 긴장

또한 여기서 유럽에서의 4개의 변화과정에 상응하는 아시아의 변혁이 틀로 중국과 소련양국의 개혁·개방,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民主化,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 한반도, 인도지나반도의 캄보디아 문제의 포괄적 정치해결,⁷⁾ 아시아·태평양경제의 통합이란 4개의 문제해결을 설정해 보면, 미소의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내재된 조건이 소멸되어서 당장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질서형성의 전망이 열린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냉전시대에는 표출되지 않았던 문제가 상당히 현재화 될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1989년 6월의 천안문사건에 의해 상당한 후퇴를 가져오면서 정치 개혁을 둘러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 노선대립을 노정시켰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민주화는 항상 一黨獨裁 폐지에서 시작된 동구의 민주화와는 다르게, 권위주의적 政治體制와 經濟發展의 균형을 어떻게 하느냐는 심각한 문제를 남게 하는 한편,⁸⁾ 「미국 인권외교」의 압력이 무겁게 깔려있다. 남북한의 통일, 캄보디아의 정치해결, 그리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과의 정치적인 해결¹⁰⁾은 언제라도 각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밀접하게

6) Aryeh Neier, "Asia's Unacceptable Standard," 「Foreign Policy」, No.92 (Fall 1993), p.42; Yoichi Funabashi, "The Asianization of Asia," 「Foreign Affairs」, Vol.72, No.5 (Nov./Dec.1993).

7) Philippe Regnier & Niu Yuanmin, "Toward a Regional 'Block' in East Asia: Implications for Europe," 「Issues & Studies」, Vol.29, No.3 (March 1993), pp.22-27.

8) Aryeh Neier, op.cit., ; Tzong-Ho Bau, "Peking's Diplomatic Strategies in a Changing World, 1989-1992," 「Issues & Studies」, Vol.29, No.3 (March 1993), pp.36-40.

9) Jusuf Wanandi,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ASEAN Nations: The Next 25 Years," 「The Indonesian Quarterly」, Vol.XXI, No.1 (1993), pp.18-20.

10) Nicholas D. Kristof,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Vol.72, No.5 (Nov./Dec.1993); Jermain T. M. Lam, "Chris Patten's Constitutional Reform Package :

연관되는 한편, 2개의 정권간의 정통성과 주도권 쟁취, 그리고 권력배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현불가능하다.

바꿔 말하자면 제2차 대전후의 '아시아의 대내전'(Great Asian Civil War)는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일본과 아시아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990년 5월의 노태우 한국대통령의 방일에서 상징되는 것과 같이 금세기의 '불행한 시기'를 둘러싼 '마음의 벽'은 아직 풀리지 않았고 수많은 현안문제가 잔존하고 있다. 즉 아시아와 일본의 과거는, 납득이 갈 정도로, 청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제통합의 문제는 유럽공동체(EC)가 단일시장을 넘어서 EFTA(유럽자유무역지역)와의 통합, 새로이 동구이 일부를 포함하는 '유럽 합중국' 구상으로까지 부상되는 유럽에 비하면 美日 무역불균형을 둘러싼 구조마찰, 일방적 경제체제 등의 '重商主義的 對決'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美日 초경제대국사이의 패권쟁탈전을 완화시킬 제도적 틀의 구축에 의해 태평양 兩岸의 경제 협력화를 어떻게하면 피하느냐가 최대의 과제일 것이다.

유럽통합의 기본원리는 유사한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제도적 융합'(institutional fusion)인데, 아시아의 경우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본질과 서구적인 복합적인 시스템이 혼재하는 「일국 이체제」(one nation, two system)라는¹¹⁾ 상당히 모순된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1997년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에 적용될 이 방법에 순조롭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천안문사건이후 중국 외교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의미¹²⁾를 갖고 있다 하겠다. 그것이 중국과 대만¹³⁾ 혹은 남북한의 경우에도

Implications for Hong Kong's Political Transition," 「Issues & Studies」, Vol.29, No.7 (July 1993);Rup Narayan Das, "Hong Kong: An Experiment in 'One Country Two Systems'," 「China Report」, Vol.29, No.2(April-June 1993);Michael Yahuda, "Hong Kong's Future: Sino-British Negotiations, Perceptions, Organizations and Political Culture," 「International Affairs」, Vol.69, No.2(April 1993).

11) 그 한가지 실례로서 작년 11월 호주의 키팅 총리가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APEC)에 불참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를 '고집불통'으로 부른 것이 외교문제로 비화되면서, 마하티르 총리는 과연 호주가 아시아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표명하였다. 즉, 호주와 아시아간의 가치관, 행동양식에는 공통점이 없다는 「문화카드」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양국간의 회해를 촉구하면서 호주 총리에 대해서는 단어사용에 주의할, 말레이시아 총리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1994년 1월 16일자 참조.

12) Tzong-Ho Bau, op. cit.

13) Frank B. Gibney, "Creating a Pacific Community: A Time to Bolster Economic Institutions," 「Foreign Affairs」, Vol.72, No.5(Nov./Dec.1993), pp.21-23.

적합한가의 여부의 새로운 관심거리이다.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균형문제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원주의 즉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경제하의 번영은 있을 수 없다는 서구적 개념이 그대로 아시아에 적용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한국이나 싱가포르의 경험에도 밝혀졌듯이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경제번영이 달성되고 민주화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¹⁴⁾으로는 될 수도 있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의 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전유럽내의 자유가 우랄산맥을 넘어서 아시아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차례의 천안문사건과 같은 유혈참사를 거쳐야만 한다면" 항상 내부긴장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우랄로부터 대서양까지의 안전보장의 새로운 틀은 인권존중과 민주적 제도의 확립을 전제로 하는 헬싱키 안보협력회의¹⁵⁾를 기초로 한 소련의 위협을 억지하면서, 독일의 비핵화를 목표로 NATO의 틀 안에서 통일독일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전할 것이다. 이러한 「헬싱키모델」을 아시아·태평양에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그것은 美蘇가 아직도 군사적인 냉전구조의 유지를 바라는 면도 있지만 동유럽에서 볼 수 있는 정치환경이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비성숙하기 때문이다.¹⁶⁾ 그 예로서 핵개발의 야심을 갖고있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여 그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지고 있지 않다.¹⁷⁾

14) 이에 대한 논의는 '개발독재'라는 즉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간에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여왔다. 이에 대해 하바드大 경제학과의 R. 바로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기고에서 "실제로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에 선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후진독재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제이식하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칠레 등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전형적인 예로 보고있다. 조선일보, 1994년 1월 4일자 참조. :Guo Zhen Yuan, "The Related Factors and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XXIV, No. 2(Summer 1993).

15)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Natalino Ronzitti,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d its Institutions,"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 XXVIII, No. 1 (Jan. -Mar. 1993) 참조.

16) 이와 관련하여 3년6개월만에 브뤼셀에서 개최(1994. 1. 8-1. 10)된 나토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소련의 개혁을 돕기위하여 동유럽 국가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나토로의 편입을 유보한 것은 냉전체제 종식이후에도 동구권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기득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것으로 볼 수도 있다.

17) Paul Bracken, "Nuclera Weapons and State Survival in North Korea," 「Survival」, Vol. 35, No. 3(Autumn 1993).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존재의의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의 번영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 러시아 위협의 경중에 관계없이 태평양국가로서의 커미트먼트를 버린다는 뜻까지는 아니다. 북경의 인권억압에는 경제제재를 갖고 임했던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이나 동아시아 각국에게는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정하여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門戶開房政策에 기초한 미국의 질서와 틀에 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식의 실행행사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요약하면, 첫째로 美日 구조마찰과 아시아·태평양의 경제통합, 둘째로 中蘇의 노선대립과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 그리고 세번째로는 인권을 둘러싼 美中의 반목과 중국을 시발로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의 개방성 즉 민주화의 문제이다. 다음 장에서는 다른 시스템사이의 마찰과 구조적 조정의 관점으로 부터 3대 긴장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Ⅲ. 제도마찰과 구조조정

1. 美國과 日本의 대립

군사력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東西冷戰이 끝난 후에 아시아의 일본을 '동'으로 미국과 유럽을 '서'로 해서 자본과 기술의 우위를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동서냉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전후 세계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세가지의 역사적인 힘의 이동, 즉 미국의 경제력의 상대적 후퇴, 경제 초강대국 일본의 대두 그리고 자본주의의 퇴조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위협이 소멸된 후에 '자본주의 국가간의 냉전'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¹⁸⁾

태평양 兩岸의 美日 긴장이 단순한 무역이나 투자의 경제문제를 둘러싼 것이라면 냉전 등과 같은 큰 사례는 없을 것이다. 美日 무역불균형에 관한 한 그 최악기는 이미 지났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경제관계의 양적 조정이 아닌 일본사회의 제도변혁 혹은 미일간의 경제적 우월에 관련된 문제라면 가치체제나 패권을 쟁점으로 냉전적 성격을 동반한다. 일본 위협론의 근원을 끊는다는 팽창주의적

18) 猪口 孝, 「現代國際政治と日本: パーるは-50年 日本外交」(東京: 筑摩書房, 1991); 渡邊昭夫, 「アジア太平洋の國際關係と日本」(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2).

인 제도와 시스템변용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른 제도와 가치체계의 관리하에 방치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정체성의 위기로 몰아 넣을 수 있다. 명치이후 일본은 바야흐로 서양의 경제체도로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면서도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분리시키는 이른바 '華婚洋裁'라는 절충주의에 의하여 근대화를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다.

슈퍼 301조라는 제재독트린과 구조장벽협약(SII)에 의한 미국의 對日 관리전략은 일본의 「적대적 무역」을 억누를려는 것이라면 레닌·스탈린주의 적대세력을 봉쇄하려했던 냉전적 발상과 지나친 변화가 아니지 않는가. 더구나,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압력은 일본인이 아시아인이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듯이 「일본위협론」의 배경에는 인종적 편견이 숨어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본 뿐만아니고 아시아 국가들도 말려들어 동서양을 분열시켜 '이개의 세계'의 심각한 상극이 저변으로 흘러 든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같이 구조마찰은 경제사회나 정치체제(의사결정과정)의 상반된 뿌리인 이상 이질된 시스템의 반작용(reaction) 내지 상호작용(interplay)이고, 그런 경우의 전략적 대응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각각의 경제내셔널리즘을 배경으로 무역관습의 공정·불공정을 다루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어프로치"인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의 兩岸에게 배타적인 불력화 경향을 고착시키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탈냉전시대의 이해조정을 공통의 물에 의거하는 국제기구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각료회의)의 제도화를 둘러싼 제문제를 중심으로의 전개가능성이다.

2. 중국과 소련의 관계정상화의 시도

동아시아에 있어서 냉전구조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서 소련세력이 중소 국경을 넘어 태평양에 까지 미칠 가능성이 없어진 한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항상 현재화되었던 중소논쟁과 국경분쟁에 까지 중지부를 찍고 정상화가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있어 양 초강대국 사이에 새로운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국제정치의 장래에 있어서 적지않은 불안정 요인이 되고 것도 사실이다.

1989년 5월의 고르바초프·등소평 양정상에 의해 성립된 중소의 획기적인 화해는 천안문사건의 충격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페레스트로이카와 新思考外交에 의해 동서냉전의 종지부를 찍고 중소대립의 방책을 끊어버리려고 한 고르바초프는 눈앞의 공산주의의 아성을 사수하려는 천안문 앞에서는 암담할 수밖에 없었다.¹⁹⁾

1959년 5월 후르시초프의 워싱턴과 북경방문(9월)에 앞서, 모택동은 "아이젠하워를 평화애호가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측근에게 말한 적이 있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가 북경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천안문 소동의 와중이었던 등소평은 "쓸데없는 혼란을 간직한 사람이다 라고 소신을 털어냈다."²⁰⁾

꼭 30년이 지난 이러한 2가지 일화는 '모스크바에서 온 방문객'을 둘러싼 북경의 모노로그와 중소의 불협화음의 유사성을 전해주고 있어 흥미롭다. 전자는 후르시초프의 워싱턴 방문에 의해 냉전이 이론적으로는 종결된다는 역사적 배경에서 '美제국주의'와 소련의 화해는 공산주의의 신성한 임무에 대한 배반이라고 하는 중국공산당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후자는 냉전을 실질적으로 종결하여 공산주의를 포기할 듯한 소련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중소대립의 발단이 된 1959년의 후르시초프의 訪中과 이것을 종결시킨 1989년의 고르바초프 방중과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전적으로 상위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단추를 달리매고 있는 점에서 궤도를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이다. 1958년의 북경의 반발은 후르시초프가 1939년에 돌연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던 스탈린과 같이 미소정상회담에 의해 냉전의 해체를 가져와 소련의 對美 협조노선에 중국공산당을 종속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북경의 반발은 모스크바의 보수파에게 후르시초프비난의 구실을 안겨주기도 했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외교는 후르시초프 그리고 브레지네프노선과도 다르다. 이것은 중국을 고립시켜 포위하려고 하는 1960년대 부터 80년대 초에 걸쳐서의 정책을 개정, 중국의 현대화 정책에도 포괄적인 지원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1972년

19) Tzong-Ho Bau, "Peking's Diplomatic Strategies in a Changing World, 1989-92," 「Issues & Studies」, Vol. 29, No. 3(March 1993); Willy Laohoo, "China's Foreign Policy in the 1990s," 「The Ko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XXIV, No. 2(Summer 1993).

20) 1955년 발언은, Andre Fontaine, "History of the Cold War," Seker & Warburg, 1970, p. 327. 1989년 발언은 「The Economist」지 1990년 2월 10일자.

의 미국이 중국 봉쇄정책의 포기에도 비유할만한 대전환이다.²¹⁾

동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국제정치전반에 미칠 중소 정상화의 영향을 생각해보면 첫째로 소련의 입장은 미국이 1970년 초에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중국에 접근했던 닉슨정권 당시의 소위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를 융합하는 형태에서 스스로의 전략적 지위를 안정시킬 수 있다. 즉 소련은 대미 긴장 완화를 추진시키는 한편, 중국과 화해에 의해 미국이 '중국카드'를 사용할 여유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중국의 입장은 대소관계를 정상화하더라도 그것이 일찌기 중소동맹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장하면서 미국 및 서방측과의 경제관계의 경제강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세째로 미국은 중국에게 쇠기를 박고 소련을 견제 할 여지가 적어지더라도 군사협력을 유지한 상태로 중국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대소 전략상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된다.

또 하나 첨가한다면 중소정상화는 소련의 인도 및 베트남의 전략적인 결속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도와 월남 양국은 중국과의 대결에 즈음하여 소련의 지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접근은 아시아대륙 중·소·인 평화공존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 고르바초프 신사고외교의 최종목표일 것이다.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 있어서 탈냉전의 권력정치는 미중소의 '3각균형' 내지는 '상호견제'의 안정적인 틀속에서 변화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중국의 천안문 사건은 그러한 상부구조에 손상을 입힐 정도의 충격을 주었고, 미중소 관계의 장래에 막대한 불안정 요인을 내재하겠끔 하였다.²²⁾

닉슨류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혹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외교에 의한 중소정상화에서도 탈이데올로기의 현실주의 노선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것이 유럽에 있어서 냉전의 종말을 따르는 것처럼 공산당 독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모스크바와 끝까지 공산당에 의한 권력독점에 고집하는 북경과의 사이에서 스위치의 작동이 서

21) Weixing Hu, "China's Security Strategy in a Changing World," 『Pacific Focus』, Vol. VIII, No. 1 (Spring 1993).

22) Marie Gottschalk, "China after Tiananmen: The Failure of American Policy," Steven L. Spiegel(ed.), 『At Issue: Politics in the World Arena』 (N. Y. : ST. Martin's Press, 1991), pp. 173-193.

로 상위하게 발생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대결이 냉전해소후에 자본주의끼리 미일냉전이 운운되는 상황에서 같은 사회주의에도 다른 국가통치의 제도적 틀이나 권력구조의 상위함을 반영한 이데올로기대립밖에 안된다.

3. 중국 인권외교의 딜레마

중소의 노선대립에 드디어 심각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보이게 이른 것은 천안문사건후의 인권을 둘러싼 미중관계이다. 그것이 단순한 미중관계로 보지않고 탈냉전의 국제정치, 특히 아시아지역에 새로운 긴장을 안게되는 문제로 떠 오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은 1989년 7월 파리근교에서 개최했던 아루슈 서미트에서 채택됐던 정치선언이다.

'중국의 인권탄압'을 비난했던 정치선언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인도적 행위를 중지토록 요구하는 한편 정치각료급의 접촉의 정지, 세계은행에 의한 신규융장의 연기 등의 엄중한 재재조치를 취해 중국의 고립화를 위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신속히 협력관계로의 복귀할 것을 기대했었으나 '일국 이체제'의 신빙성을 무를 수 없는 홍콩에 대세 국제사회의 계속적 지원을 표명했던 것이다.

한편, 1980년대를 통해서 일관된 소련 비난이 종결된 동서관계에 관한 선언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회구하는 조짐이 동측에서 보인다고해서 동측 지도자가 법률·관습·제도의 개혁에 착수하고 서측 제국과 공히 일하는 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인식과 인권을 둘러싼 중국 비난과를 대비해 보면 냉권적 이데올로기 대립의 무대에서 유럽으로 부터 아시아에 옮긴 것이라는 등의 인상마저 면할 수 없다.

아루슈 정치선언의 역사적 의의는 동서의 40여년에 걸친 군사대결, 이데올로기상의 반목과 불신으로 변해 대화와 협력의 기초가 형성되려는 것에 인식을 했던 점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정치선언이 이루어진 인권사상은 1987년의 프랑스 혁명 혹은 13세기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17세기의 권리장전이라 서구적 다원사회의 가치관에 도 기착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권위주의적인 아시아사회에도 적용하려면 과연 다른 가치체계의 사이의 사상적 대립은 피치 못 할 것이다. 중국보수파로서도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서구화된 국가로 바꾸어 공산당 지도체계를 뒤집어 놓으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과 민주주의라고하는 도의적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에 기초한 외교는 실질적 이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 정책과 모순 돼 어느 것을 우선하느냐에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한다.

과거 부시정권은 중국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의회와 여론의 비판의 비등한 가운데 갱신 기한에 쫓긴 대중 최혜국대우를 일년간 연장해야 할 결정²³⁾을 취하였다. 이것은 최혜국대우의 파기가 미중무역 혹은 홍콩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워싱턴과 북경의 외교관계에서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을 피해야 한다는 등의 배려를 감안했던 것이었다. 동시에 천안문사건후 미국이 취해온 대중경제조치는 계속되면서 인권상의 완화조치를 중국정부에 요구해야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다.

1990년 7월의 휴수턴 서미트 정치선언도 중국이 그 후의 1년간에 행한 정치범 석방과 같은 몇가지 조치에 있어서 시인을 했던 것 등의 일체의 정치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경제제재조치에 있어서도 일본의 圓차관동결해제에 미쳐 이론을 주장하지 못한 것 등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상호보완하자는 것에서 합치없는 상황속에서는 그것을 구가할 수 없다는 엄한 견해(의장총괄)를 재확인하고 있다.

미중관계의 역사적 전개를 돌이켜 보면, 1972년의 「상해콤뮌iqué」에 의한 관계정상화는 이데올로기상의 적대관계를 버리고 현실적 실무적 이해관계에 의거 중국을 소련과 나란히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인정하여 금세기의 남은 기간에 미칠 세력균형의 틀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그 키워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일국지배를 저지하는 '반패권'조항이고 72년의 상해코뮌iqué 기타의 외교문서에 포함되어 78년의 中日 평화조약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다.

23) 부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美의회가 2000년 北京올림픽 개최에 반대한 것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정치와 올림픽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으로 만일 북경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중국의 개방을 더욱 촉진하여 중국인과 올림픽에 참가한 외국인과의 접촉기회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어서 중국을 세계에 공개하여 중국이 이룩한 성취와 결점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현재 중국의 경제는 번창일로에 있으며 중산층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도로건설과 통신계통에 필요한 인력과 원자재 팽창하는 소비재주요 추가성장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해선 미국기업에 충분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00년이 되면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미국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일보, 1993년 12월 1일자 참조.

그런데 1989년의 고르바쵸프 訪中에 의한 중소공동코뮤니케에도 똑같은 반패권조항이 명기되게끔 되었고 워싱턴으로서의 중국카드는 유효성을 잃고 있는 한편 북경도 중소동맹의 부활을 부정하는 데 의해 소련카드를 포기한 것이다. 그 결과 미중소의 지정학적 삼각균형의 기구가 아시아 태평양의 전략적 안정의 상부구조로서 성립되는 형태로 왔던 것은 수시로 지적했던 바와 같다.

그러나 문제는 닉슨·키신저의 현실주의적 대중어프로치를 가능케 한 북경의 '문혁이후'의 정세와는 다른 '천안문사건'이후의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미국은 인권억압의 중국에 대해서 현실주의외교가 상당한 희생을 하더라도 도덕적 어프로치를 뺏길 수 없다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중국만이 아니고 많은 작든 권위주의적인 동아시아제국에의 미국의 대응에 따라 다니는 문제이다.

냉전상황이 완화되면 미국이 지정학적인 이해와 인권내지 민주주의의 도의적 가치와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키노정권을 공산주의의 NPA(신인민군) 기타의 반정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리핀 內政에 미군이 간섭하더라도 이것은 미국의 안전보장정책의 틀 속에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 혹은 북한 등의 내정에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위험천만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비추어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존중치 않는 등의 정권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입장으로 볼 때 현실정치에서 인권외교에 길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및 서구의 엄중한 비판과 경제제재를 받는 중국으로서도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의 민주화 요구를 용인하면 정권기반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와같은 미중의 경직된 관계는 미중대결시대의 政經分離政策에서도 흡사한 미묘한 선택을 일본에도 부셔하고 있다.

IV. 변화와 통합의 상호작용

1990년대의 아시아 태평양의 국제관계가 강대국의 이데올로기와 전략적 이해의 조정보다는 대립·항쟁에 의해서 파란만장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

이나 마찰이 심화되어 전쟁이나 대공함과 같은 파국에 이르지 않는 한 어떠한 해결점을 보이기 시작하여 새로운 질서 형성을 지향할 것이다. 즉 대립과 항쟁속에서 변화와 통합으로의 계기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변화와 통합에 의한 질서재편으로의 움직임은 정치이데올로기나 군사력보다도, 경제력에 의거한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체제를 지키고 적대세력을 봉쇄하는 군사전략에 관심을 집중시켜 경제적 이해보다도 안전보장의 코스트를 우선 해 왔다. 그러나 미소 양 초대국들도 재정불균형에 상관없이 군비경쟁에 우선권을 두었는데, 현재는 군사와 경제의 우선순위가 역전돼 국제적 커미트먼트와 그것을 받혀줄 경제재원 균형에 따라서 1990년대의 아시아 태평양의 국제질서형성과 관련된 전략적 과제료가 집약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다각균형과 협조로의 시나리오는 다음 3개의 영역에 식별될 것이다. 그 하나는 미중소의 「군사전략의 삼각관계」로 부터 미일중의 「경제전략의 삼각관계」로의 이동이다. 두번째가 태평양에 있어서 소련의 대외정책의 중심이 군사로부터 경제로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일중소의 시베리아·극동개발, 그리고 세번째는 미일·아시아 NIES·ASEAN·대양주에 중소 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등과 같은 포괄적인 구상이다.

1. 미국, 일본과 중국의 경제전략의 삼각관계

군사전략으로부터 경제전략으로의 이동이 있지만 어떠한 지배도 인정치 않는 반패권의 논리가 관철되는 지정학적인 것에 불과하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적우위는 경제적인 패권을 상실해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의한 아시아 경제의 지배를 견제하는 강력한 중국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중국에게 군사지원을 불사했던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일본이 그 경제적 우위와 기술력의 경우 아세아에서 1990년대의 국제분업체제를 결정하는 것에는 강한 저항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그것과 발란스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없었던 것으로는 하지 못한다. 이것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는 미일중의 「경제전략의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일본의 경제지배를 미국의 우월성에 의해 배재하는 정책에 대해 묵인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다.²⁴⁾

천안문사건이후의 중국이 미국이나 서방측의 제재에 의해 국제사회로 부터 추방 결과, 중국경제는 대타격을 받았다. 1988년에 22억불에 올랐던 관광수입은 89년에는 반감돼 부시 대통령의 실득에 의거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차관의 연기, 일본의 엔차관의 동결 등으로 합병사업의 투자활동은 대폭 후퇴를 발생시켰다. 새로이 수출의 둔화와 수입의 증대에서 국제수지가 악화로 대외채무는 88년의 400억대의 수준으로 부터 89년에는 일시에 470억불로 늘어났다.²⁵⁾

그런데 중국의 대미무역은 89년에 122억 5,000만불로 증대, 전년비 21.9%의 신장세를 보였다. 이것은 대일무역이 189억대로서 전년비 0.2%가 감소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무역규모의 차이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추계에 의하면 90년대 말까지 미중무역총액은 200억불대에 달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적어도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97년의 홍콩반환권에는 홍콩을 포함하는 중국의 대미무역규모는 고려치 않고 있으나, 이것은 경제적 삼각관계에 '구조적변화'를 일으켜 중국 대미무역에 있어서 미일균형이 용이하게 달성될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대중최혜국대우를 일년연장한 최대의 이유는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에서의 타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자유시장의 틀 속에서 효율적인 경제기능을 유지할런지는 뚜렷한 보장은 없다. 등소평이 말하는 「일국 이체제」는 인권억압의 권위주의적 지배의 위장에 지나지 않느냐고 고저 10년간의 극적인 발전을 성취한 홍콩을 통해서 대미중계무역이 천안문 사건이 후에도 그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권억압에 대한 제재가 과연 중국의 대외개방·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위에서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중국의 장기적인 개혁, 개방에 관심을 갖는 아시아의 많은 정치지도자는 북경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억압적인 세력에

24) S. J. Anderson, op. cit.

25) Jin-dong Yuan, "Mainland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 Performance, Problems, and Perspectives," 「Issues & Studies」, Vol. 29, No. 3 (March 1993); Yen Chang-mei, "Mainland China's Tax System in Comparison : Before and Since 1979," *ibid.*

게 손을 빌려 개혁을 지연시킬 악순환을 초래케 할 뿐이다라는 견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중정책도 심각한 모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공히 대중비난의 아루슈선언에서 다시 휴스턴선언에서 엔차관의 동결해제로 서방측의 묵시적인 승인을 얻은 일본도 중국의 정치민주화와의 경합에서 신중한 배려가 요구된다.

장래 미중관계의 악화는 일본으로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미일중 삼각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홍콩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국 이체제의 '권위주의적 복합체제'와 '인권문제'의 정치이데올로기의 모순을 경제이익의 추구하고 다각적 균형의 현실주의에 의한 순환의 틀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컨대, 해남도에서의 액화천연가스(LNG)개발의 미일중 합병사업은 천안문 사건 후 1990년 1월에 이룩한 총액10억불의 대형프로젝트로서 전도를 경제특별구로 지정한 대외개방정책의 전개에 있어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²⁶⁾ 해남도에서 대련에 이르는 경제의 개혁, 개방의 전제는 북경의 보수파와 개혁파의 치열한 권력투쟁에 의해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현대사의 성패는 미일협조의 경제협력에서 개혁파의 지원이 어느 선까지 결합되느냐에 달려 있다.

2. 시베리아, 극동개발의 잠재성

'南深北河' 이것은 남의 深琿에 대한 대응한 북의 黑河를 합친 말로서 흑룡강(아무르강)연안의 국경 마을 흑하를 거점으로 한 중소 邊境貿易²⁷⁾을 발전시켜보려는 중국의 대외개방의 의욕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북경방문(1989년 5월)을 계기로 정상화되면서 중국동북지방과 소련의 시베리아·극동개발을 둘러싼 경제협력이다. 그 선착을 하겠다는 것이 흑하와 그 對岸인 아무르의 州都인 프라크페시친스키를 연결하는 바터무역, 각종 제조공업의 합병, 중국인 노동력의 수출 등과 같은 經濟交流이다.

26) 중국정부가 본토와 주변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할하기 위하여 8大 경제권 창설을 서두르고 있다. (1)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2) 福建-臺灣 경제권, (3) 앞의 두 경제권에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中華 경제권, (4) 山東-한국 경제권, (5) 동북아 경제권, (6) 흑룡강 경제권, (7) 중앙아시아 경제권, (8) 서남아시아 경제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7)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지대에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키로 합의(94.1.4)하였다. 양지역의 무역과 금융 및 첨단기술산업분야의 상호교류를 증진키 위한 것이다.

소련의 시베리아·極東·연해주개발은 1986년 7월의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밝혀졌듯이, 페레스트로이카 경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전 소련 시스템속에서 그 잠재력을 살려나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협력에 있어서는 모스크바와 북경의 정치개혁노선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상호이익 추구의 자세가 떠오르고 있다. 90년 4월의 이봉수상의 방소에서는 바터무역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달러로 결제를 할 것에 합의를 봤다.

6월의 천안문사건후 흑하와 프라코페시친스키간의 정기 궤리의 수송루트가 개설되고 흑하와 하얼빈간에 재건된 철도에 의해, 중국동지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육상루트가 개설 됐다. 한편 하얼빈과 하바로프스크를 연결하는 정기항로가 개설되었다. 그 연장선상에는 일본의 동북지방의 니이가다도 포함된다.

새로히 신강의 우르무치와 가싸흐스단의 톨차과를 잇는 철도건설이 1992년에는 완성될 예정으로 이것이 이뤄지면 동아시아와 유럽시장을 맺는 物流의 최단 코스가 출현하게 된다. 그 주변에서의 고속도로·전신·전화·우편물 통신망의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중국동북, 구만주로 부터 내몽골·시베리아에 걸쳐서의 철도건설 플랜트경우는 금세기초의 제정러시아의 남하정책과 한반도로 부터 중국대륙으로의 진출을 떠올리는 일본의 이해와 충돌되어 여기에 영국·국이 뒤엎혔던 이합집산의 역사가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한 중국분열의 역사가 뒤바뀔이 없지만 「北大荒」이라 불리우는 이런 대지개발이 중소양국만의 손에 맡겨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北大荒을 北大倉으로 변화시켜 시베리아를 캘리포니아로 만들려는 중소의 야심적인 개발전략에는 연해주의 나호드카, 하바로브스크, 내륙의 프라크페시친스키 그리고 중국측에서는 흑하, 동강, 수분하, 훈춘, 장령 등 일련의 「특별경제구」(SEZ)에 한국과 일본, 미국의 참가에 의한 합병프로젝트가 중요한 목표로서 짜여져 있다. 특히 산림개발로부터 소형컴퓨터 제조까지의 「일중소」 3국공동사업을 폭 넓게 전개하려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새롭게 근년에 주목되는 것은 소련 중국 북한의 삼각지대²⁸⁾에서 소련의 연해주와

28) 북한도 두만강개발계획을 위하여 나진-선봉지역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중국의 훈춘, 연길 등 조선족 자치구를 연결해서 한국의 참가를 촉구하는 다각적인 지역개발론의 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가세한다면 「環일본해(동해)권 구상」²⁹⁾이 부상한다. 그 전략적인 표적은 북한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데 따라 경제교류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정치관계의 개선, 더욱이 남북한 통일에의 대비책과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금후 10년의 사이에 “통일한국”이 실현된다고 했을 경우 그 GNP합계량은 2000년의 시점에서 3천6백억불대에 달할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후의 경제발전에 일종의 상승효과가 증가돼 현재 남북합계의 2천6백억대를 일천억대 상회해서 현재의 아시아 NIES의 통계 혹은 중국의 GNP수준에 견줄만 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의 냉전구조의 해소·개혁과 통합으로의 최대 장애의 하나로 북한이다. 우선 소련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개선 강화하고, 국교수립에 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평양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지지를 계속되는 한, 서울과의 관계는 자연히 한정적 단계에 멈추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치적 변혁과 통합으로의 파워시프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1860년의 북경조약에 의해 러시아와 청국이 조선족이 거주하는 훈춘, 연길 주변을 분해시켜버린 역사적인 찌꺼기를 씻어내어 변경의 땅에 진실한 정상화가 안겨지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환태평양 안정성의 확보

미일중의 경제적 삼각관계, 미일중의 시베리아·극동개발, 또한 한반도 주변의 중소, 한반도 삼각지대개발은 모두 전후 냉전의 틀을 초월한 국제질서구축을 위한 시도이다. 전자는 팩스아메리카나의 패권적 구조의 변혁을 촉구하면서도 일본의 우위를 인정않고 중일, 미일의 억재균형에 의해 안정을 보전하려는 점에서는 현상유지적 색채가 강한 것이다. 일방 후자는 소련의 기권적 영향력에서 명목적인 것이 돼 버려 남북한 통일로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변경의 시나리오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9) 일본해권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松下圭一, 「國際化時代와 地自體 役割」, 김 진호 (역), (제주: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pp.52-67 참조.

그러나 양자 공히 초강대국의 후퇴의 국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이익 우선의 내셔널리즘과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한 힘의 균형의 논리에서 지배되었던 것으로서 그것들을 새로운 고차원의 국제주의의 제도적 틀로서 재편성해야 하는 것 만이 2000년을 향한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적 테마가 된다.

아시아·태평양 내지 환태평양경제권의 제도화의 시도로서는 과거 10년 이상에 걸친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ECC), 태평양 경제위원회(PBEC), 그리고 정부간에는 ASEAN 등의 기구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두 구성원 멤버의 정책조정이나 무역장벽의 철폐 등의 의사결정메카니즘을 잃고 이른바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제도적 조정기능을 위한 지역주의는 허구였다. 확립된 리더십에서 권력과 부의 배분 메카니즘과 이해조정의 틀을 갖지 못한 국제질서 등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태평양의 경제구조는 북미, 일본, 아시아 NIES, ASEAN, 그리고 대양주의의 구성단위의 사이에서 1970년대 이후 제조공업품의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호의존 관계가 급속하게 심화됐다. 이들 제국, 제지역의 「태평양역내무역」은 1970년의 시점에서 드디어 54.4%에 달했으나 그것이 88년에는 65.8%로 급상승하고 있다. 즉 무역구조에 관한 한, 경제통합의 정도는 EC(87년 64.5%)의 수준을 넘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일본열도로 부터 NIES, 중국의 연해지역, ASEAN에 이르는 서태평양의 모든 「성장의 회랑」의 아시아역내무역은 1990년대의 중반경 태평양 횡단무역을 상회한다는 견해였다. 이것은 1980년대 중반의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으로의 세계무역이 역사적인 이동을 할 것이다. 또한 미일, 서구의 직접 투자도 활발해서 NIES 각국의 투자를 포함한 다면 태평양 투자의 8월까지가 역내자금으로 공급조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직접투자가 압도적이어서 곧 아시아 NIES 들어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제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해외총생산력의 25% 이상이 ASEAN지역에서 이루어져 금세기말까지 투자총액은 1조불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수출지향 경제의 아시아 NIES는 항상 세계무역의 1할 이상을 점해 외자준비는 4개국 합쳐 1천억불의 수준을 넘어서 자본수출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특히 홍콩의 중국투자는 광주에 대한 외국투자의 80%를 점하는 등 대단히 활발해서 주장 텔

타지역으로부터 백만인의 노동력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홍콩은 중국상품의 대미 증계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소련과의 무역확대에 의해 탈냉전의 신시장 개발에 강력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 캄보디아의 신국면, 베트남의 투자와 시장개척에 적극적이다. 이와같이 아시아·태평양의 경제협력은 자연발생적인 무역확대와 시장경제의 형성에 직시한 움직임이고, 유럽의 EC와 같이 당초부터 제조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추상적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과정을 중시한 아시아적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히 인위적인 제도화의 틀을 끼운다면 자유롭고 역동적인 아시아 경제의 활력을 말살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89년 11월 정부간 조직으로서 창설된 APEC에 EC와 같은 제도적 기능을 그냥 기대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ダイ나믹한 경제발전에는 마찰이 따르는 것으로 불균형시정 때문에 공통에 룰에 의거한 제어와 협조의 장이 어떠한 필요하게 되어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의 아시아 경제지배를 견제하고 ASEAN에 접근하는 장으로 APEC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또한 ASEAN은 과도한 對日의존을 회피하기 위해 북미시장으로의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스스로의 시장개방 노력으로 아시아 NIES와 같이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에 대항할 매카니즘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APEC에 과해진 정책목표에 있어서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센터」(CSIS)는 다각적 무역자유화와 가트무역체제의 강화, 가트에 의해 카바되지 않는 지역 경제정책 예컨대 환태평양 경제권의 마그로 정책의 조정,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각적 투자활동의 촉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블럭의 회피, 환경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둘러싼 경제안전보장에의 어프로치의 5종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4번째의 일본에 의한 동아시아의 경제지배를 저지하기 위해서 APEC의 제도적 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은 1992년 통합 EC가 타지역에 차별적인 관세장벽을 설정하는 따위와 같은 것은 없다 하더라도 동서 독일의 통합 동구제국의 시장경제화 등 극히 곤란한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대서양으로 부터 우랄까지의 「신유럽의 정체성」의

확립에 전력을 집중하고 그 결과 좋은 싫든 불문하고 유럽 우선주의에 기울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때 환태평양지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신유럽과 환태평양의 관계조정에 결정적인 역할은 전자와는 안전보장, 후자와는 경제적인 면에서 사활적 이해를 갖는 미국이다. 미국의 경제적 장소는 유럽이 아닌 태평양에 있고 NATO를 통한 안전보장의 코뮤티먼트가 있는 한 태평양의 이해관심을 유럽에 전하는 역할을 미국은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APEC의 존재 의의는 환태평양의 다각적균형에 가세, 냉전후의 유럽과의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로벌 파트너십의 강화를 촉구할 것이다.

V. 展 望 : 결론에 대신하여

아시아 태평양의 국제관계는 미·소·중·일의 권력정치가 여전히 지배되고 있는 지역이다. 더욱이 군사력을 정책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세력균형의 틀속에서 국가생존을 걸고있는 투쟁의 역사로 얼룩진 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 태평양의 국제관계를 유럽의 그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복잡한 양태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는 이 지역 국가들의 자발성은 어쩌면 4강대국의 묵시적인 전략적인 동맹관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다. 그 한가지 예로 취임이후에 아시아 태평양카드와 유럽카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볼 때, 이러한 느낌은 어느 정도 적실성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유럽내의 極右민족주의자들과 연계하여 구소련의 영광을 찾으려는 노력은 중앙아시아의 자치공화국의 주권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되고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등소평사후 1850년대와 1920년대의 경우와 舊소연방의 해체처럼 지역분열의 가능성이 한층 높다하겠다. 일본은 경제적인 역할 뿐만아니라 「문화 APEC」창설제의 등과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현재 일본의 정당정치외의 재정비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팽창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확신된다.

이처럼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이 지역의 맹주임을 자처하는 국가들의 '자기식 독트린'을 고집하는 한 상당한 난관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현상유지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도 범세계적인 차원에 발생하는 상호의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경쟁의 원리를 인정하면서도 교섭과 타협을 통해서 최종적인 조화를 구하는 외교적인 어프로치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힘의 균형과 상호의존이라는 2개의 틀에서 전략과 외교의 구별이 필요한 것은 주변 약소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고 병익,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 疏遠과 통합,"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 Arik Dirlik(저), "아시아 태평양권이라는 개념: 지역구조창설에 있어서 현실과 표상의 문제," 김 영희(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 박 병규, "법세계화인가, 지역주의인가," 「동향과 전망」, 통권 19호(1993/봄 여름 합본호).
- Frank Gibney(저), 「새로운 태평양시대, 일어서는 나라 주저않는 나라」, 방형남, 권순택(역), 서울: 동아일보사, 1993.
- 이 삼성,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과 한국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 이 종원, "일본의 대외전략 구도와 아시아정책,"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 최 원식,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 하 상운, "일본의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망," 「동향과 전망」, 통권 19호(1993/봄 여름 합본호).

2. 외국문헌

- Amitav Acharya, "A New Regional Order in South-East Asia: ASEAN in the Post-Cold War Era," 「ADELPHI PAPER」, 279(1993).
- Aryeb Neier, "Asia's Unacceptable Standard," 「Foreign Policy」, No. 92(Fall 1993).
- Bilveer Singh, "ASEAN's Arms Procurements: Challenge of the Security Dilemma in the Post Cold War Era", 「Comparative Strategy」, Vol. 12, No. 2(1993).
- Francois Godement, "Europe and Asia: the Missing Link," 「ADELPHI

- PAPER], 176(1993).
- Frank B. Gibney, "Creating a Pacific Community : A Time to Bolster Economic Institu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5, (Nov./Dec. 1993).
- Hari Singh, "Prospects for Regional Stability in South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Millennium', Vol. 22, No. 2, (1993).
- J. Richard Walsh, "A Pillar of the Community : the Role of APEC in US Policy,"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I, No. 2 (Summer/Fall 1993).
- Jusuf Wanandi,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ASEAN Nations : The Next 25 Years,' 'The Indonesian Quarterly', Vol. XXI, No. 1 (1993).
- Michael G. Plummer & Chung H. Le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in the 1990s : Implications for Asia," Pacific Focus, Vol. VIII, No. 1 (Spring 1993).
- Muthiah Alagappa, "Regionalism and the Quest for Security : ASEAN and the Cambodian Conflic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6, No. 2 (Winter 1993).
- Nicholas D. Kristof,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Vol. 72, No. 5 (Nov./Dec. 1993).
- Paul Krugman, "The Uncomfortable Truth about NAFTA," 'Foreign Affairs', Vol. 72, No. 5 (Nov./Dec. 1993).
- Philip Regnier et als., "Toward a Regional Block in East Asia : Implications for Europe," 'Issues & Studies', Vol. 29, No. 3 (March 1993).
- Stephen J. Anderson, "Japan as an Activist State in the Pacific Basin : Japan and Regional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I, No. 2 (Summer/Fall 1993).
- Yoichi Funabashi, "The Asianization of Asia," 'Foreign Affairs', Vol. 72, No. 5 (Nov./Dec. 1993).